

G-Welfare Weekly Report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100세 시대, 노인복지 이대로 괜찮은가?

01 주요 내용

- 세계노인복지지표(Global AgeWatch Index)¹⁾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복지 수준은 최근 3년 동안 세계 90여개국 가운데 중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남
 - 노인 복지 수준을 ▲소득 ▲건강 ▲고용·교육 ▲사회적 자립·자유 등 4개 분야로 나눈 뒤 각 분야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100점으로 놓고 평가

구분	전체 순위	소득	건강	교육·고용	사회적자립자유
2013년(91개국)	39.9점(67위)	8.7점(90위)	74.5점(8위)	56.3점(19위)	68.3점(35위)
2014년(96개국)	50.4점(50위)	32.5점(80위)	58.2점(42위)	48.6점(19위)	64.1점(54위)
2015년(90개국)	44.0점(60위)	24.7점(82위)	58.2점(42위)	47.6점(26위)	64.1점(54위)

- 노인 삶의 질적 수준이 높지 않다보니 노인 행복지수도 OECD 34개국 중 32위로 최하위수준에 불과하여 지속적으로 길어지고 있는 노년기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
 -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2013년 기준 81.8세로 OECD 평균(80.4세)보다 높고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전망으로 100세 수명시대가 현실화될 것이나 열악한 노인복지수준으로 노인행복수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
 - 상기 4개 분야 중 노인의 소득, 건강, 일자리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4.13 총선 공약을 검토하여 노인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변화를 전망해보고자 함
- 먼저, 우리나라 노인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노후 소득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임
 - 노후에 가장 안정적인 소득 보장책은 연금이지만, 공적연금²⁾ 수급율은 2014년 현재 39.6%이며, 국민연금의 1인당 월평균 수급액은 337,560원(2015년)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수준
 - 국민연금의 낮은 보장수준을 보완하기 기초(노령)연금을 2010년에 도입하여 수급자가 448만명(2015년)에 달하고 있지만, 수혜율은 당초 약속과 달리 소득 하위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평균 수급액도 2015년 7월 현재 178,155원에 불과
 - 2016년 보건복지부는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수급대상자 발굴·신청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으나,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차감하고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률(44%, '14.4분기)을 낮추기에는 역부족으로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급여체계 전환을 고민하여야 함
- 다음으로,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기능 약화 및 상실로 인해 다른 연령에 비해 발병률, 특히 중증(重症)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의 비용지원이 적고, 포괄하는 대상자도 제한적
 - 노인 중 61%³⁾는 건강을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스스로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47.7%⁴⁾가 '나쁘다' 고 생각
 - 노인성질환⁵⁾자 수는 2010년 기준 약 120만명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치매환자 수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11.7% 증가

1) 세계노인복지지표는 헬프에이 지 인터내셔널이 유엔인구기금 (UNFPA)의 지원을 받아 매년 10월 1일 세계 노인의 날에 발표하는 노인의 삶의 질과 복지 수준을 측정하는 세계 최초의 노인 관련 지표로, 2013년 최초로 발표

2)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포함

3) 보건복지부 (2011).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4) 통계청(2014). 사회조사

5) 노인성질환은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기타 퇴행성 질환 의미함

-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인구의 7.0%인 46만명('15년)에게만 제공되어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
- 또한 노인 1인당 의료비는 '14년 현재 322만원이며, 전체 진료비의 35.5%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3.2%로 OECD 평균(75%)의 84.2%에 불과
- 수명연장과 노인인구 비중 확대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책대상자의 범위를 넓히고, 17조원의 건강보험 흑자를 활용하여 본인 부담금 인하 및 적정 수준의 의료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
- 세 번째, 노인고용률은 2016년 현재 31.6%로 OECD 평균(12%)보다 2.6배가 높지만, 급여 수준이 낮고 대부분 단순노무직으로 일자리보다는 사회참여의 성격이 강함
 - 노인 중 30%는 생활비를 직접 벌고 있지만 정부의 노인일자리 수당은 20만원에 불과하여 생계에 보탬이 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욕구에 부합하는 일자리 개발 및 수당 인상이 필요
- 4.13 총선에서 각 정당은 소득, 건강, 일자리 등에 대한 공약을 담고 있으나 노인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접근보다는 개별 프로그램을 제시한 것에 그쳤다는 평가
 -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 노인소득관련 공약이 없어 노인빈곤 해소에 소극적

	소득	건강(돌봄)	일자리
새누리당		·간병비하루 최대 2만원 감축 ·의료비 정책제 기준 2만원까지 인상 ·치매노인보호프로그램 제공 ·건강백세운동교실, 건강마일리지 확산 ·홀몸어르신사회관계 활성화 및 자살예방 사례관리 강화	·'17년~' 20년까지 일자리 매년 10만개 확대 공급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노인친화기업 지정, 노인생산품 우선 구매 권장 ·시군구에 어르신일자리전담기관 확대 및 전담인력 처우개선
더불어민주당	·소득하위 70%노인에게 차등 없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에게 기초연금 중복급여 허용하여 실질적인 혜택 제공	·노인장기요양대상 10%로 확대 ·만성질환 관련약값 본인부담금 절반경감 ·국공립요양시설 전체 30%까지 확충	·노인일자리 2배로 늘리고 수당을 월 40만원으로인상
국민의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폐지 ·생애주기별 노후소득 준비 프로그램 마련	·장기요양대상자 2배 확대,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경로당에 건강 100세 운동교실 보급 ·공공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 ·간병인·돌봄서비스 조기 확대 시행	·어르신 일자리 2배 확대, 수당은 단계적으로 2배 확대 ·일자리 기간 12개월로 확대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 일자리 개발, 노인생산품 인증 및 판매자 지원
정의당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차등 없이 단계별로 30만원 지원 ·기초생계비 소득산정 시 기초연금 급여 제외 ·기초연금에 대한 국고보조율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전액 국고 총당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매년 1%씩 확대 ·국공립장기요양시설 확대 ·소규모요양시설 확대 ·노인돌봄종합지원센터 설치, 돌봄과 요양서비스간 연계 ·공공실버임대아파트, 독거노인을 위한 흡셔어링 등	·은퇴자협동조합 등 다양한 노인 맞춤형 사회적 경제영역 지원 확대

02 경기도 시사점

- 경기도는 노인복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매년 복지수준 향상 정도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의 불합리한 소득공제 기준 변경을 건의
 - 경기도 노인빈곤율은 2011년 기준 42.4%로 현재 빈곤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곤란
 - 경기도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율은 59.9%로 전국 평균(66.4%)보다 낮는데, 이는 6대 광역시에 비해 주택 매매 및 전세 비용이 높음에도 소득인정액 산정시 중소도시의 주거유지 비용을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기준 변경을 중앙정부에 건의

02 사도/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경기도 시군별 기초연금 수급 격차

기초연금은 지난 '14년 기초노령연금 제도 개편을 통해 대표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수급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

-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이하 노인에게 월 20만원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 소득빈곤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의 제도
 - '16년 현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00만원·부부가구 160만원이며*, 연금지급액은 단독가구 20만 4,010원·부부가구 32만 6,400원임
 -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연금액은 대체로 식비(40.2%), 주거비(29.9%), 의료비(26.5%)로 지출
- 경기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 133만 4,101명이며 이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전체의 59.9%인 79만 9,536명임
 - 지역별로는 대도시·중소도시가 밀집한 광역단체일수록 기초연금 수급률이 전국평균(66.4%)보다 낮음: 서울(53%)·경기(59.9%)·세종(61%)·제주(61%)·울산(64.1%)·대전(64.7%)

*소득인정액 기준

〈표 1〉 전국 시도별 기초연금 수급률('16. 3. 기준)

	전국	경기	서울	인천	충북	충남	세종	대전	강원
수급률	66.4	59.9	53.0	70.7	72.3	71.9	61.0	64.7	70.2
	광주	전북	전남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부산	제주
수급률	66.9	76.4	82.7	68.7	64.1	77.3	73.4	70.0	61.0

단위: %

- 도내에서 수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두천(74.7%), 가장 낮은 지역은 과천(35.8%)임
 - 전체 노인인구 중 기초연금 대상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동두천(74.7%), 가장 적은 지역은 과천(35.8%)으로 도내 시군 간 수급률 격차가 2배 이상이며,
 - 기초연금 신규신청자의 탈락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양평(43.5%), 탈락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용인(12.3%)임. 탈락의 주요인은 소득인정액 초과임

〈표 2〉 경기도 시군별 기초연금 수급률 및 탈락률('15. 9. 기준)

지역	수급률	탈락률	지역	수급률	탈락률	지역	수급률	탈락률
경기	59.6	26.0	군포	57.5	30.8	고양	57.0	27.4
수원	59.5	16.9	광주	59.9	26.1	남양주	65.2	23.3
성남	49.9	28.8	김포	56.6	29.1	의정부	66.8	25.3
부천	67.4	14.1	이천	63.2	33.7	파주	62.8	19.0
용인	45.9	12.3	안성	65.0	36.0	구리	60.1	29.3
안산	65.0	29.7	오산	64.3	13.4	양주	65.7	22.7
안양	57.9	27.8	하남	55.9	28.3	포천	65.6	34.9
평택	58.5	40.3	의왕	58.2	30.5	동두천	74.7	23.8
시흥	69.8	28.6	여주	66.8	31.9	가평	65.3	35.9
화성	57.8	31.3	양평	55.9	43.5	연천	66.1	25.4
광명	64.8	32.9	과천	35.8	33.5			

단위: %

- 심각한 노인빈곤으로 인해 기초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지역별 기본재산액·재산의 소득환산율 등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에 대한 형평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임

2. 재단 주요사업 안내

사업명	주요내용
복지경영 최고지도자 과정 총동문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5.31.(화) 17:00~20:00 • 장 소 : 경기복지재단 3층 교육장 • 내 용 : 복지경영 최고지도자 총동문회 발기인 총회 및 출범식 • 문 의 : 경기복지재단 역량강화팀(☎267-9352)

03 FACT CHECK

노인은 노인친화상품을 좋아하는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고령친화 8대산업*의 시장규모는 2012년 27조4000억 원에서 지난해 39조3000억 원으로 43.4% 증가하며 ‘골든 실버’ 시장으로 관심 증가
- 20~30대에 못지않게 디지털기기(스마트폰, 노트북 등)를 소유하며, 해외여행을 자주 가고, 외모를 가꾸는데 돈을 지출하는 액티브 시니어**가 신소비층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그러나, 60~85세 시니어 계층은 오히려 ‘시니어 전용 제품’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 60~85세 1000명을 인터뷰***한 결과, 10명 중 4명(44.7%)만이 ‘나와 관련 있는 제품’ 이라고 인식하며, 60~64세에서는 77.3%가 ‘나와 무관한 제품’ 이라고 응답
 - 금융 상품이나 교육과 같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나마 긍정적이었지만, 휴대폰이나 잡화 등 소비재 부문에서는 거부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햄버거, 피자, 편의점 음식에 대한 노인들이 선호도가 낮을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편의성을 이유로 인스턴트 음식을 한 달에 1번 이상 먹는다는 답변도 67%를 차지
- 노인이라는 특정 집단이 아닌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디자인 (universal design)과 같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함
 - 노인전용제품이라는 것 자체가 연령차별(ageism)의 하나로 노인도 다른 연령대와 똑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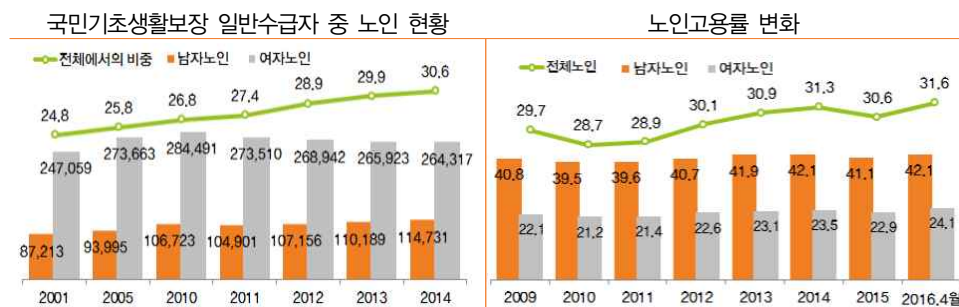
*의약품·의료기기·식품·화장품·고령친화용품·요양·주거·여가

**일정 수준의 소득(50대는 부부 합산 월 500만원, 싱글과 60대는 300만원 이상)을 갖춘 구매력 있는 50~60대

***닐슨코리아의 '6085 라이프스타일 보고서'

04 통계로 보는 복지

노인복지 실태



*단위: %, 명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각년도(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우)

- 2014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30.6%로 점차 증가하며,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2.3배 높음
 - 전체 노인인구에서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94%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 44%를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적절한 생활보장이 되지 않고 있음
- 65세 이상 고용률은 전월 4월 기준, 31.6%로 2012년 이후 30%대를 유지
 - 여성 빈곤자 수는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높지만 고용률은 남성의 절반수준으로 여성 빈곤이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노인의 경제활동은 생계를 위함이 대부분이지만 실제 시간제·임시직 등 급여와 고용안정성 측면에서도 열악한 상태를 보이고 있어 일자리 질에 대한 고민이 필요